

# 신정부 소프트웨어 정책에 대한 희망

소만사 | 김대환

## 1. 서론 : 지식경제부 내에서 소프트웨어산업의 위상은?

매출로만 볼 때, 소프트웨어는 전자, 자동차, 조선, 철강 등 한국을 대표하는 분야 각각의 1/100도 안되는 산업이다. 매출규모로만 본다면 '현대자동차의 뒷바퀴'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소프트웨어 업무가 신정부 들어 지식경제부로 이관되었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을 위한 여러 정책들이 입안 및 실현되어오고 있다. 대표적 정책으로는 소프트웨어 분리발주를 들 수 있다. 부서이관에 상관없이 이 정책들은 계속 진행되어 결실을 맺어야 한다. 부처의 이름처럼 지식경제의 시대에 소프트파워의 중요성은 더욱더 부각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아직, 매출로는 미미하나 소프트웨어는 전 산업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기반산업이 되고 있다. 보잉사 비행기 제조과정의 50%가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이뤄진다고 한다. 표면적인 매출 이면에서 진행되는 '산업의 소프트웨어화'라는 거대한 움직임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에서 더 큰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현재 한국을 먹여살리고 있는 것은 1960년도에 설립된 기업과 산업들이다. 다시 말하면 20-30년 후, 우리를 먹여 살릴 씨앗은 바로 지금 뿌려져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의 신성장엔진으로 항공기/로봇 등의 고부가가치 기계산업,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의 제약과 의료바이오산업, 모든 산업의 메타산업인 금융업, 그리고 두뇌집약/지식집약/세계시장 기반의 소프트웨어 산업을 꼽는다.

경제가 올바로 성장하려면, 경쟁력과 부가가치를 가진 제조업이 성장해야 한다. 비이성적인 부동산버블이든 모래성 같은 투기자본이든, 돈만 벌면 최고라는 가치관으로는 이 나라의 미래가 심히 걱정된다. 거대 유통브랜드가 제조업을 장악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모습 또한 불안하기만 하다.

## 2. 본론 : 산업의 성장을 위하여 기업가와 정부에게는 어떤 책임이 있는가?

### 2.1 기업가에게는 혁신의 책임이 있다

- 기업가들은 정부에 의존하여 사업을 전개해서는 안된다. 현대판 '물산장려운동'처럼 기업은 '국민의 혈세가 로열티로 해외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펼친다. 이 논리는 기업가에게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 물론, 산업 초창기에는 시장보호가 필요하다. 그러나 자생력을 갖추어야 하는 단계에서도 진정한 사업가정신을 갖추지 못한다면 그 기업은 더 이상 도약하지 못하고 온실 속의 화초로 남을 뿐이다.
- 포스코 건설은 철강수요가 없는 한국에서 과잉생산이라며 반대했다. 경부고속도로 건설은 시기상조라며 정치권 내에서도 반대의 소리가 드높았다. 삼성의 반도체 진출은 그룹이 망하는 길이라며 들고 일어났었다. 조선사업은 모두가 무모하다고 할 때, 오백원 지폐 속의 거북선 그림을 보여주고 투자받아 일어섰다. 지금 한국경제의 신화들은 모두 혁신적인 리더가 기업가 정신으로 창조해낸 것이다. 소프트웨어 사업가에게도 상상을 뛰어넘는 리더쉽과 신화가 필요하다.
- 지금 경제수준에서 소프트웨어로 1천억 순익 기업을 만드는 것이 어려울까? 60년대 전쟁폐허 속에서 오늘의 산업화를 창출한 것이 어려울까? 필자는 후자가 훨씬 어렵다고 보며 따라서 전자를 가능한 일이라고 본다.
- 필자를 비롯한 50대 이전 젊은 세대들은 전 세대들의 고생에 무임승차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솔직히 부끄러운 생각이 들고 남 탓 정부 탓하기 전에 내가 떳떳할 수 있을까 뒤돌아보게 된다. 산업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면 결국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업가정신으로 혁신하고 창조적인 파괴를 하지 않은 채 안주해 왔기 때문이

다. 좋은 인재들의 고생을 꽃피우지 못한 것은 방향타를 잡고 있는 선장의 책임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 2.2 정부는 공정한 게임의 룰을 만들고 시대정신을 모아주어야 한다.

기업가의 책임을 백번 인정한다. 그러나, 현재 여건을 볼 때는 '몇몇 기업가의 혁신만으로 소프트웨어 산업이 자생적으로 발전할까'라는 의문이 든다.

- 몇몇 영웅의 개인기만으로 산업이 발전할 수는 없다. 앞서 말한 철강, 조선, 반도체 신화 뒤에는 정부의 지원과 인프라 정책이 존재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한두 명 영웅의 탄생과 몰락보다는 생태계 구성과 토양을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유실수뿐만 아니라 잡초와 잡목까지 골고루 심어서 생물학적 다양성(biological diversity)을 확보하는 숲만이 계속 번창할 수 있다.
- 2000년도, 벤처붐을 타고 소프트웨어 산업에 진출했던 그 수많은 인재와 자금은 왜 꽃피우지 못한 채 저버렸을까? 과연 모두가 모멸해져드이고, 한탕을 바라고 왔기 때문일까? 구조적인 측면에서 개선할 것은 없었을까?
- 다시한번 되새겨보면 현재 우리나라 산업의 거대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삼성전자, 포스코, LG 전자, 현대자동차는 진정 그들 혼자만의 힘으로 일어섰을까?
- 국가가 보증을 선 차관도입, 다양한 세제혜택과 보조금, 높은 관세와 국산품 애용운동, 좋은 인재 선발전 등의 직간접적인 혜택 이외에, 한국의 성장동력이라는 자부심을 부여해주었기 때문에 한국 최고 인재들이 선뜻 투신, 인생을 걸고 산업의 신화를 창출해 낸 것이다.

## 3. 결론 : 분리발주확대, 유지보수현실화, 공정한 품질인증! 소프트웨어산업의 해결책이다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해결책은 매우 분명하다.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확대, 유지보수현실화, 공정한 품질인증의 3가지이다. 일괄발주의 폐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일괄발주 환경에서 우리의 소원은 늘 을이었다. 먹이사슬 상에서 병, 정은 고객인 갑이 기침을 하면, 폐렴으로 쓰러지는 가련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분리발주가 정착되면 고객은 중간마진 없이 최상의 서비스를 받게 되고, SW기업은 좋은 인재와 함께 세계수준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두 번째로 정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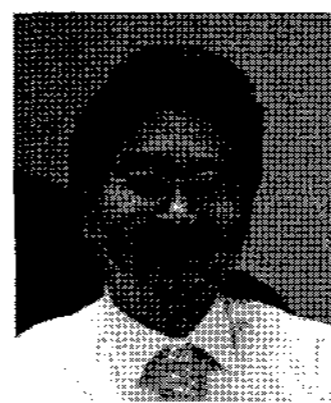
주도적으로 나서서 유지보수 비용을 현실화해주어야 한다. 안정적인 서비스모델 확보없이 국내 소프트웨어산업은 성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공정하게 적용되는 품질인증으로 기술력 있는 기업이 인정받는 게임의 룰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이 세 가지만으로도 산업은 30% 이상 성장할 수 있다. 이 세 가지에 해외시장 확대를 위한 해외진출지원이 강화되면 더 할 나위 없는 힘이 될 것이다.

이 모든 해결책의 근간에 전 사회적으로 소프트웨어산업의 기를 살려주는 일이 있다. 자원이 부족한 한국에서 두뇌집약적인 소프트웨어산업은 미래 한국의 신성장엔진이라는 자부심 그리고 비전을 젊은 세대에게 드높여주어야 한다.

최근 2-3년 동안 20대 개발자가 들어오고 있지 않다. 기존의 인재들은 안정성과 브랜드를 찾아 게임이나 포털 등의 서비스기업으로 옮겨가고 있다. 앞으로 5년 내에 순익 100억 이상 창출하는 SW기업이 10곳 이상 나오지 못하면, 앞으로 영원히 나오지 못할 것만 같은 불안감이 엄습한다.

인맥 많고 접대 잘하는 것이 핵심역량이고 기술개발과 아이디어창출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사회풍조에서는 지식기반 소프트웨어 산업의 미래는 없다.

정부의 일관성있는 정책의지와 실행을 부탁드리며 글을 끝맺고자 한다. 국방부,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정부의 3대 구매자가 분리발주와 유지보수절차를 정확하게 진행해주신다면 소프트웨어 산업에는 가문의 단비가 될 것이다. 또한 그 정부정책을 기반으로 기업가는 혁신하여 20-30년 후 한국의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고 소프트웨어로 세상을 바꿔낼 것이다.



김대환

1995 서울대학교 산업공학 학사  
 1997 서울대학교 산업공학 석사  
 1997~현재 (주)소만사 보안S/W 대표이사  
 1999~2000 전산망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CONCERT) 자문위원  
 2001~현재 미국재난복구협회(DRI) Korea Board

Member

2007~현재 국술모(국산대표솔루션CEO협의회) 회원  
 관심분야: 내부정보유출방지, IT컴플라이언스  
 E-mail : kdh@somansa.com